

북한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남북경협과 외부 지원의 방향성

미무라 미쯔히로 | 일본 ERINA 주임연구원 | mimura@erina.or.jp

1. '시장화' 문제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이하 “남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경제상황을 표현할 때, ‘시장화’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런데 북한경제는 과연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필자는 이 점에 의문을 표한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안에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북한경제에 시장적 요소가, 많은 편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북한경제의 상태를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다고 주장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제가 시장경제화되고 있다고 할 때, (1) 사회적 분권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2) 경제 주체에 의한 분권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3) 자유 경쟁이 필요하고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4)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¹⁾ 또한 이행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영 기업의 사유화와 민간 기업 설립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 소유권의 보장과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하고, (2) 국내외 거래의 자유화, 통화 교환성 도입, 자유 경쟁의 확립이 필요하며, (3)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여 민간 금융부문을 확립하고, (4) 증권 시장을 확립하며, (5) 시장경제에

1) 西村可明, 「市場經濟への移行における經濟政策—總論—」, 「ロシア經濟改革を題材とした移行国向け研修資料」, 内閣府經濟社會總合研究所, 2001, pp.2~3.

입각한 국가 재정 제도와 세금 제도를 확립하고, (6) 파산법, 회사법 등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를 ‘시장화 이행 단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사기업’을 육성하려면, 현 소유제를 기초로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북한의 올바른 시장화를 위한 외부의 노력

그럼 우리는 북한경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국가의 경제적인 힘이 부족하게 되어 상당한 정도로 개인 간 거래와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 실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외부 세계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현존 제도의 틀 안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북한에서 비국영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이 소유하는 금전자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그 예금을 보호해주는 상업은행을 설립하여 개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비국영 경제주체도 상업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소규모 사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은행 대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금 사용 목적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가능한 것은 국영 기업이나 사회협동단체에 대한 대부를 통한 사실상의 사기업 자금수요 확보다. 이러한 금융을 통한 사실상의 ‘사기업’ 인정은 상업은행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상업은행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얼마 전부터 금융을 통한 자금 회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중앙은행 김천균 총재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²⁾ 이 기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금융정책 중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외화 소비를 간편화하기 위한 전자결제 카드인 “나래”(무역은행)와 “고려”(고려은행)가 사용되고 있다.³⁾ 상점, 식당, 편의시설 등에서 사용된 금액은

2) 『조선신보』, 「기업실적 올리고 원활한 자금순환/사회주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2015년 2월 22일부 [http://chosonsinbo.com/2015/02/py_150222/]

각각의 은행 구좌 이체를 통하여 업체에 지불된다. 카드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던 상당액의 외화가 전자결제 카드 사용을 통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결제용 카드이므로 이자는 없지만, 향후 이러한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처럼 국영 상업은행의 설립과 예금 및 대출 자유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부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정부와 관료,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가 바뀌고자 하는 동력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개발금융기관에 가입하거나 WTO 같은 기관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3.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남한에서는 북한을 자국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미·중·일·러·EU 등 주변국이나 관계국 들은 남한과 북한을 개별의 국가로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경협을 진행할 때 남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남북이 사실상 2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경협의 방법과 방향성을 제정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많아지고 남북의 경제가 서로 상대방에 의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일정한 유사성이 회복되어, 남북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남북경협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하나의 정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 향후 3~4년 내지는 늦어도 8~9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이나 동북아 국제 정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불확실한 요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가 변화를 지향하였을 때,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과 방법을 존중하면서 외부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력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3) 이러한 카드는 은행에서 외화를 입금하여 입금 시의 공식환율로 변환된 "외화원"(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원)으로 저장된다.